

# 건설소식

##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4월부터 시행

### 연면적 1000㎡ 이상 업무시설 대상 생산전력 거래도 허용

정부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업무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양 부처가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을 공동으로 마련, 4월부터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민간 건축물 소유주가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자발적으로 설치한 후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임을 정부로부터 인증(등급별 인증서 및 인증마크 부여)받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민간 등은 이를 표시하거나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물부분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의 보급이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인증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인 업무

시설 건축물(설치 의무대상 건축물 제외)이다. 건축물의 소유자가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은 50일내에 이를 심사하고 인증여부를 결정하고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은 건축물 완공 후 신청·심사하게 되며 건축물 완공 전에는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심사는 ISO 13790 등 국제 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초과하면 1등급을 부여하며, 15% 초과 20% 이하는 2등급, 10% 초과 15% 이하는 3등급, 5% 초과 10% 이하는 4등급, 3% 초과 5% 이하는 5등급을 부여한다.

지경부는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력(공급인증서)은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 ‘국토해양지식 정보센터’ 오픈

### 국내외 건설교통 콘텐츠 총망라...정보 공유의 場 열다

국토해양부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을 이끄는 연구개발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오픈했다.

건설교통분야의 R&D 종합관리기관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구축한 ‘국토해양지식정보센터’(LandMark)는 그동안 국내외에 산재된 건설교통 관련 다양한 지식정보(산업, 기술, 정책 동향 및 논문, 특허, 연구보고서, 학술·학위 논문, 해외 우수리포트 등)를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연계함으로써 기술분야별 종합적인 정보검색 및 획득·분석이 가능하도록 구현됐다.

국토해양지식정보센터에서 수집·생성·축적된 지식정보는 정보분석시스템(LANDSCOPE)을 통해 기술동향분석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 간의 정보공유 등 쌍방향 지식교류 채널기능까지 구현됨으로써 정보제공에만 특화된 다른 시스템과 달리 정보 수집에서 분석, 지식교류에 이르는 국내 유일의 지식공유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이 외에도 국내외 우수기관에서 연구된 미래 유망기술을 엄선해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가전략기술과 국내외 기술 및 정책뉴스 정보도 제공한다.

2008년 12월 ‘건설교통 지식정보센터 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건설교통기술분야 국가 R&D 사업을 선도하고 지원하는 체계적인 기술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연계해 추진됐다.

국내외 건설교통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획득할 수 있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유망 기술예측이 가능한 이 시스템을 통해,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술자료, 특허자료, 동향 분석 자료를 원 스톱(ONE-STOP)으로 검색할 수 있는 국토해양지식정보센터가 관련분야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 정보 획득과 지식교류의 장으로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